

## 2 안정적인 외자 유입 방안

- (현황)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으로 1차 외환 위기는 모면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외채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 정책) 최근의 정부 정책은 외자 도입의 제약 조건 제거 측면에서는 의의가 큼
- (추가 방안) 하지만 외화의 자유로운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외채 자체를 삭감할 수 있는 안정적 유입 방안을 추가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1)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 억제, 2) 공기업과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개방 확대, 3)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채 자체를 소멸, 4) 외자 유입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의 일괄 체제 형성 등을 강구해야 함

### (1) 국내 외채 상환 전망

- 단기 외채의 만기 연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1차 외환 위기는 모면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외채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 본 연구원에서 예측한 경상수지 흑자 추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 외채 규모 전망(「IMF경제정보」, 3. 12, 8 쪽)에 의하면, 2002년 총외채 전망치는 1,165억 달러로 98년 총외채 추정액인 1,337억 달러의 12% 정도에 불과한 172억 달러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99년부터 국내 GDP 성장률이 5%대에 이르고 원화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되어도 99년 이후 총외채/GDP 비율은 20~25%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경상수지 흑자 이외의 다양한 외자 유입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임

### (2) 정부의 외자 유입 대책과 한계

- 정부 역시 외자 유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음
  - 98년에 들어서 정부는 외자 유입 촉진을 위해 단기 금융 시장 개방 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 단기 금융 시장 개방 계획의 주요 내용
    - 개방 대상: 기업 발행 상품(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과 금융 기관 발행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 개방 시기: 기업 발행 상품은 2월 16일부터, 금융 기관 발행 상품은 98년말 이내
  -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 적대적 M&A의 허용

- 공장 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의 확대
-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간주되는 장기 차관의 허용 범위 확대
- 대통령 업무 보고시 발표된 향후 추진될 주요 계획
- 적대적 M&A 조기 전면 허용을 위한 법 개정
- 외국인 투자의 일괄(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 세제 감면 혜택과 같은 투자 유인책 마련
- 외국인 토지 취득 자유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최근의 정부 정책은 그동안 존재해왔던 외자 도입의 제약 조건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큼**

- 그러나 외화 유동성의 자유로운 유출입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 외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채 자체를 삭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외자 유입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안정적인 외자 유입 확대 방안**

○ **안정적인 외자 유입 확대 방안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강구할 수 있음**

- 첫째, 유입된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을 최대한 억제
- 둘째, 외국 투자자가 매력을 갖는 공기업과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개방 확대
- 셋째, 외채 자체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외자를 유입
-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자 유입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개방화 정책의 추진 단계서부터 일괄 체제를 형성

○ **(유입된 외화 자금의 안정성 제고) 대량 외화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외환 거래세(Tobin tax) 부과: 단기 투기성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을 억제하고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일정 세금을 부과함
- 외자 유출시 보유 기간별 세금 부과: 예를 들어 자금 유입 1년 후 유출시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전에 유출되는 경우는 잔류 기간에 따라 역진적으로 세금 부과
- 가변 예치 의무제 실시: 유입 자금 중 일부를 일정 기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함
  - 칠레에서 91년 6월 이후 시행해 오고 있는 '무이자 지급 준비 예치제(URR: Unremunerated Reserve Requirement)<sup>1)</sup>가 이의 좋은 실례임

1) 해외 차입액의 일정 비율을 일정 기간 동안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임. 차입 기간이 짧아질수록 외자 도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단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해외 차입액의 30%를 차입 기간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은행간 협조 체제 강화: 선진국 및 동아시아의 중앙은행들과 국제 금융 정보 공유, 국가간 통화 스왑 거래와 같은 환위험 완화 자금 거래 활성화
- (외국인 투자 대상의 확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국내 사업 분야에 대한 개방이 실현되어야 함
  - 공기업의 민영화와 외자 지분 유입
    - 포철, 한전, 한국중공업,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이에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함
  - 대형 SOC 투자에 외국 자본 참여 허용
    - 도로, 항만, 공항, 고속철 건설과 같은 대형 SOC 사업에 외국인 투자 허용
    - SOC 투자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유인책도 함께 강구해야 함. 예를 들어 부대 수익 사업권 허용, SOC 사용자에게 대한 자유로운 이용료 결정권 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외채의 지분 투자화) 외채를 직접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외자 유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채무-주식 전환(debt-equity swap) 방법의 활용
    - 칠레에서 활용하여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성업공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법정 관리 대상 기업을 비롯한 부실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對外 채무 일부를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주식으로 전환
- (체계적이며 일괄적인 제도 개선 추진) 효율적인 외자 유입을 위해서는 '외자 유입촉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유입 자금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함
  - 각 부처간(재경부, 외통부, 건교부, 지방 정부 등) 흩어져 있는 외자 유입 방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진 일정을 분명히 밝혀 외자 유입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특히 이를 통해 외자와 관련된 여러 법률간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함
    -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었음에도 공정거래법에서는 제약 요건이 존속하고 있어 간소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위의 위원회를 통해 '외채 삭감 일정'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외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유 병 규 bkyoo@hri.co.kr ☎724-4060)